

“남북 정상회담 盧 재임중 해야”

김대중 前 대통령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15일 6·15 남북 정상회담 7주년을 맞아 “나는 결국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본다”며 “노무현 대통령 재임 중에 정상회담을 해야 다음 정권도 계속 하게 된다. 여기서 맥이 끊어지면 다음도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남·북한, 중국 등에 방송되는 미국의 소리 방송(VOA)과의 특별 회견에서 8·15 이전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노 대통령이 북한하고 정상 회담을 하면 남북 긴장완화를 크게 가져 오고 북한에 경제적, 문화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고는 살 길이 없을 것이다. 2·13 합의에 따라 핵문제는 어떻게든 해결되고 북한의 비핵화는 결국 이뤄질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정착의 프로세스로 “남·북한, 미국, 중국 4자가 합의해 결국 평화협정을 맺어야 하고 이를 UN과 6자 회담이 지지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남뉴스

보험설계사·캐디 단체결성권 부여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근로자로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보험설계사와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앞으로 노동조합은 아니지만 단체를 결성해 사업주와 계약조건 등을 협의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간주돼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파업권) 등 노동3권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 의원입법 형식으로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특고종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면서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고 ▲노무를 제공할 때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보험설계사(19만5천명)와 학습기 교사(10만명), 골프장 경기보조원(1만4천명), 레이콘 기사(2만3천명), 화물기사(35만명), 덤프기사(5만명) 등 총 90여만명으로 추정된다.

연남뉴스

한덕수총리 박람회 후보지 시찰

한덕수 총리는 15일 오후 여수세계 박람회 후보지 및 관련 사회간접자본시설(SOC) 건설현장을 시찰했다.

한 총리는 여수시청 대회의실에서 여수시장으로부터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뒤 “여수 박람회 개최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차질없이 노력하고 있음을 오는 18일 세계박람회기구(BIE) 파리 총회에서 회원국들에게 적극 설득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현지에 와서 보니 여수가 박람회 주제가 가장 적합한 도시 같다”고 밝히고 “현재 추진중인 도로 등 SOC 시설들을 박람회 개최 전에 완공하기 위해 견고부 장관과 예산처 차관에게 예산지원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여수=박영기자 ykpark@

中國자본 1조5천억원 무안기업도시에 온다

전남도·무안군 - 中 8개 대기업 투자협약 체결

중국 대기업들이 무안기업도시에 16억 5천만 달러(1조5천30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박종영 전남지사와 서삼석 무안군수는 15일 영암 현대호텔에서 중국의 8개 대기업과 무안기업도시의 한·중 국제산업단지에 16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투자협약에서 황회해 지주집단은 한중 IT 산업단지 건설에 2억 달러, 중국국가개발은행 산동분행 및 황회해 지주집단이 한중 자동차부품 생산단지 건설에 3억 달러, 산동성 상업집단과 류엔윈프론티어러가 국제명품아웃렛 단지 건설에 4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또 산동성 상업집단이 아웃렛 단지 외에도 무안산동국제회의센터 건설에 5억 달러,

IT 산업단지	2억달러
자동차부품단지	3억달러
명품 아웃렛	4억달러
국제 회의센터	5억달러
의료·한약단지	2억달러

산동성 삼북병원유한회사와 의료법인 운양 의료재단이 한중 종합의료단지 건설에 1억 5천만 달러, 제남행림생물기술유한공사와 Brain Group이 한약재표준화유통단지 건설에 1억 달러를 각각 투자한다.

전남도는 이번 투자유치에 따라 IT, 자동차부품, 의료, 바이오산업을 중심으로 한 중국 기업들이 한·중국제산업단지에 대거 입

주할 경우 관련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투자유치는 전남도와 무안군이 한국과 중국의 젊은 기업가 모임인 ‘한·중 청년기업가 서밋(SUMMIT)’을 유치하면서 무안기업도시 등 전남도의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와 매력적인 투자환경 등을 적극 홍보해 이뤄졌다.

이날 투자 협약식에 앞서 중국의 청년기업가 대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투자유치 설명회에서도 이 같은 전남도의 개발 프로젝트와 투자환경, 미래 전략산업 등이 집중 소개됐다.

박종영 지사는 “한·미 FTA 타결로 중국의 해외생산수출단지로서 전남도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상승했다”며 “특히 IT, 자동차부품, 의료, 바이오 등에 대한 투자는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한 투자로서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대한조선-영암군 MOU체결

대주그룹(회장 허재호) 계열사인 대한조선 박재영 부회장(왼쪽 네번째)이 15일 영암군청에서 김일태(왼쪽 다섯번째) 영암군수와 선택용 블록제작 전문업체인 대한중공업 공장 준공 및 향후 투자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에 앞서 대한중공업은 이날 오전 영암 대불산업지내 블럭공장에서 스틸커팅(Steel Cutting)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靑-李 ‘검증 배후설’ 법정다툼 비화

靑, 李측 대변인 고소... 李 맞고소 검토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겨냥한 범여권의 과장공세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청와대 배후설’을 제기한 이 전 시장측 대변인을 검찰에 고소하고, 이 전 시장측이 맞고소를 검토함에 따라 양측간 검증공방이 법정다툼으로 비화되고 있다.

특히 검증 대전전선의 무게중심이 ‘李-朴’에서 ‘靑-李’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상대측으로 검증중국의 중심에서 밀려나게 된 듯한 박근혜 전 대표측이 ‘주도권 회복’을 노리며 노무현 대통령 공격에 본격 가세해 청와대와 양 주자 진영간 검증공방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이 선정한 후보를 지지하겠다”며 대선개입의지를 분명히 한데 대해 양 주자 진영 및 한나라당이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하고, 중앙선

관위 3차 고발 및 검찰 고발을 적극 검토하고 나서면서 대선정국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는 15일 이 전 시장 측이 범여권의 검증공세를 “청와대 지시에 의해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정권차원의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이 전 시장 캠프의 박정준 진수회 공동대변인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문재인 비서실장 명의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전호선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이 후보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이 후보는 어떤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두 대변인을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 캠프의 좌장인 이재오 최고위원은 “청와대가 고소를 하면 우리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맞고소를 비롯해 모든 준비를 해 왔다.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투쟁을 원하면 투쟁을, (청와대에서) 결번 가는 대로 응해 주겠다”며 맞고소 방침을 시사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도 이 전 시장과 박 전 대표에 대한 검증공세를 강화했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 후보들은 각종 의혹에 대해 날날이, 한층 의혹 없이 밝히는 게 그들의 책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이 전 서울시장 부인의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한 우리당 김혁규 의원과 ‘이명박·박근혜 X-파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장영달 원내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연남뉴스

시 설

노인학대 68%가 친자식 행위라니...

노인학대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광주·전남 노인학대 예방센터에 접수된 노인학대는 354건에 이른다. 노인학대는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하는 특성상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 노인학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노인학대의 68%가 친자식에 의해 이뤄진다고 하니 할 말을 잃게 된다. 이 중에서도 아들(242건)의 학대가 70%를 넘는다. 노인을 깎듯이 모시고 보살펴야 한다는 우리 전통의 경료효친(敬老孝親) 사상이 가정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노인학대의 유형도 다양하다. 언어·정서적 폭력은 물론이고, 방임하거나 심지어 신체적 폭행까지 일삼고 있다고 한다. 끼니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거나 흥기를 휘두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노인학대의 주된 원인은 경제적 어려

움이다. 병원비 등 부담비가 부담이 되어 늙은 부모를 방임하게 되고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제적 자립 능력이 없는 노인일수록 학대를 더 많이 받는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문제는 노인학대의 해결책 마련이 간단하지 않다는 점이다. 가족지원, 사회 시스템 구축, 제도 완비 등이 서로 연계돼야 하는데 우리 사회는 그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노령화가 가속화하는 현실에서 노인학대 방지법 등 보다 구체적인 관련법을 제정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노인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자립능력을 증대시켜 가족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노력도 있어야 한다.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15일)’을 계기로 노인은 개인적·사회적으로 자식과 젊은 사람들이 돌봐야 한다는 사회적 약속이 확립돼야 할 것이다.

대선후보 검증 정치공방으로 안 된다

대선 후보 검증 공방이 폭로전을 넘어 맞고소전으로 비화하고 있어 안타깝다. 청와대는 ‘검증 배후설’을 제기한 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이 전 시장 측은 청와대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내부사정도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 전 시장 측은 박근혜 전 대표를 겨냥해 ‘청와대의 이명박 낙마시

키 전략의 1단계로 박 전 대표 측근들이 앞장서 의혹을 부풀렸다’고 공격했다. 박 전 대표 측은 “이 전 시장이 이성을 잃고 미쳐 날뛰고 있다”고 반격했다. 얽히고 설린 정치권의 싸움이 전면적으로 치닫고 있는 양상이다.

국가의 장래를 책임지는 대선후보에 대한 검증은 철저하고 엄격해야 한다. 이 전 시장이나 박 전 대표에게 제기된

의혹은 반드시 검증해야 할 대상이다. 대선후보의 과거 행적이나 이력, 재산 형성과정 등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다.

하지만 후보검증이 정쟁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상대방을 흠집내기 위한 음해성 주장이나 근거없는 의혹 제기는 정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지 소모적 정치공방이 아니다.

검증공방이 과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나라당은 후보 결선을 시작했고 범여권은 유력 후보조차 없이 표류하고 있다. 본선 무대가 열리면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마당에 범여권과 청와대까지 나서 정쟁을 부추기는 것은 불행사이다. 정치권은 구태정치와 네거티브 전략을 접고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후보검증의 본래 의미를 살려야 할 것이다.

靑·전발연 12년만에 분리

전남발전연으로 새롭게 출범

靑주발전연은 내달 법인 신설

광주·전남발전연구원원이 출범 12년만에 전남발전연구원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원은 15일 마지막 이사회를 갖고 법인 명칭을 전남발전연구원으로 변경 발족하기 위한 정관변경 및 운영규정 개정, 신임이사 선임, 원장 공모 기준 등을 심의, 의결했다.

아울러 광주발전연구원도 오는 7월 중 법인 신설 방식으로 발족할 예정이어서 1995년 통합 연구원으로 출발한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은 12년 만에 분리됐다.

이에 앞서 전남도는 광주시와 실무협의를 통해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출연기금 237억 원의 배분(전남 157억원, 광주 80억원)과 직원 배치 등을 마무리했고 지난 8일 전남도의회에서 전남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를 제정했다.

새로 출범한 전남발전연구원의 정

관·규정에 따르면 이사 수를 기존의 30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축소하고 당연직 이사 5명은 전남도 소속으로 개편됐다.

또한 정기간 동신대 총장, 박준근 전남도 정책자문위원장, 이성용 광양시장, 황우홍 강진군수, 이송자 전국주부교실전남지부장 등 선임직 이사 5명을 새로 선임했다.

또 원장 공모에 기존의 대학 출신, 공무원, 정부·민간연구원 출신과 함께 기업 경영인 출신도 응모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바꿨다.

직원 수는 연구직의 경우 기존 13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연구원을 지원할 사무직원은 10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는 등 연구인력을 확충했다. 또한 전남의 특성에 맞춰 해양·복합·농업분야 전문가 3~4명을 연구원으로 충원키로 했다.

전남도는 다음주 중 신임 원장 공모 공고를 통해 원장을 선임하고 조례·정관 개정에 따른 일부 규정과 조직 정비 등을 마무리한 뒤 7월 중 전남발전연구원 개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빛日만평

- 김종두



국민이 기가 막혀...

“시민사회협약 규정없어 단체 난립 우려”

광주시의회 문화수도특위 토론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포함된 시민사회협약제도의 규정 미비로 시민사회 단체의 무분별한 난립과 갈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문화수도특별위원회(위원장 손재홍)가 15일 오후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가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추진 방향’에 대한 토론회에서 김해룡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시민사회협약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 공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시민사회의 협력과 도움을 이끌어 내는데 유용한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협약 체결의 당사자가 될 다양한 분야의 시민사회 단체가 새로이 결성되는 등 숫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나아가 “광주시의 조례안에 나온 시민사회협약제도는 체결 당사자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유사 시민단체들의 대립, 각종 시민사회협약의 남발 등으로 적지 않은 부작용을 예상한다”며 “시민사회협약 체결당사자 조항에 요건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규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영필 함양대 객원교수도 “시민사회협약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해야 할 광주시의 역할에 대해 모호한 부분이 많으며 그 활동에 지방장부가 개입할 개연성이 있다”며 “협약위원회 위원의 위촉 조건을 명확히 하고 공공단체와 시민단체 간 갈등을 완충시켜 줄 공모위원의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이 되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치경기자 jkpark@kwangju.co.kr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幸祐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福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 1부 2200-618	사건부 2200-690	시업 2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75)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